

세대별 인상속도 차등... 50대 1%p 오를때 20대 0.25%p

연금개혁 추진계획

젊은 층 일수록 보험료 천천히 인상
2040년 기준 모든세대 13% 달성
저소득층 지원대책 미흡 지적도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연금개혁안은 젊은 세대의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젊은 층일수록 보험료를 천천히 인상해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중장년층을 위한 마땅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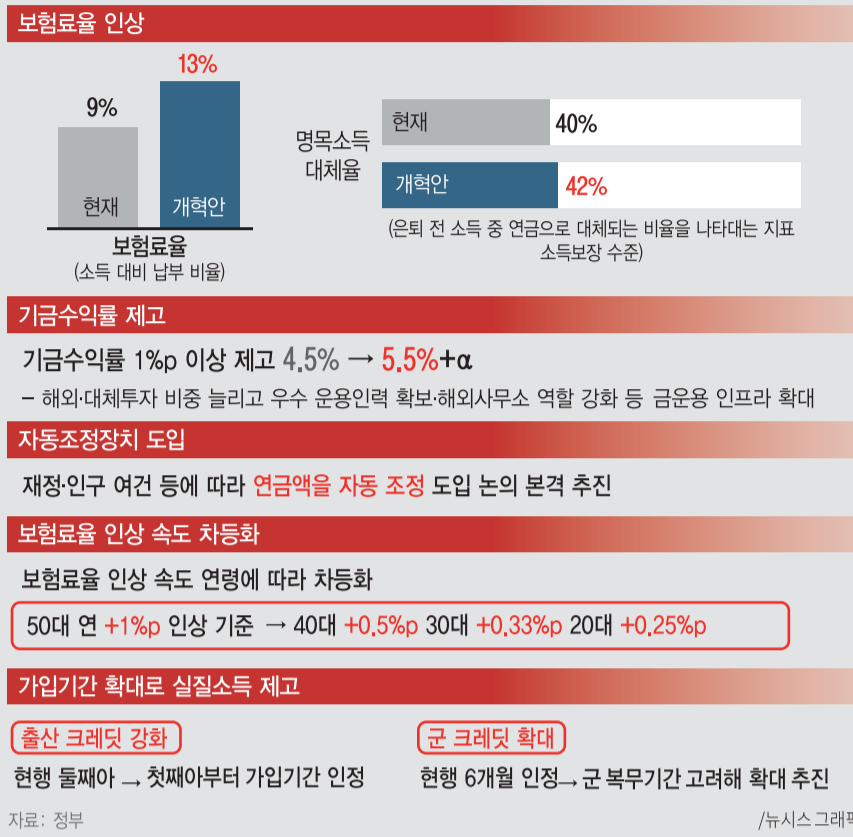
◆젊은층, 연금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가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은 출생연도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게 핵심이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할 때 50대 가입자는 매년 1.0%포인트(p)씩 오르지만, 40대는 이의 절반 수준인 0.5%p씩, 30대와 20대는 각각 0.33p, 0.25%p씩 오르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13%까지 인상되는 데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국민연금 개혁안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에 이르게 된다.

앞선 두 차례 개혁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청년일수록 부담은 커지고 혜택은 적어진다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40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50대에게 남은 평균 보험료율은 9.6%, 20대는 12.9%로 벌어진다. 은퇴 전 소득 대비 받는 돈을 뜻하는 소득 대체율이 42%로 인상될 경우, 50세 소득대체율은 평균 50.6%, 20세는 42%

로 차이가 난다. 잔여 납입 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층이 젊은 세대에 비해 덜 내고 더 받는 셈이다.

현행 59세인 의무가입연령도 64세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33년이면 65세가 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감안하면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수급 직전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고, 그만큼 실질 소득 대체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급여 사각지대 우려 여전히

다만, 국민연금 납입이 쉽지 않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은 미흡하단 지적이 나온다. 연령별 차등을 두는 것은 중장년일수록 가입 기간이 길 것이라는 가정에서 나온 것인데, 이 범주 안에 들지 못한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납입을 못하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급여 사각지대에 놓이는 노후 빈곤층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후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중신 성격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제력이 없거나, 국외 이주 등으로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이르기 전까지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덧붙인 '반환일시

금'을 수령하게 된다.

실제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50대는 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6238명이었는데 이 중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은 207만8798명에 달했다.

정부는 기존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완책으로 거론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납부를 재개할 시 보험료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고령자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도 올린다. 현재 33만4810원인 기초연금액을 2026년까지 소득이 적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40만원까지 올린 후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향후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입자들이 장기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1면 '대출절벽 논란에 답한'서 계속

"풍선효과, 우려 수준 아냐"

그러면서도 대출 제한 정책이 은행별로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일률적·구체적으로 지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은행권에 대한 금감원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달 은행이 공급한 주담대는 9조5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월간 기준 가계대출이) 5조5000억원 이상 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대비 가계대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만으로는 이런 추세를 잡기 어렵기에, 금융당국이 다소 비난을 받더라도 지금 타이밍에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현재 가계부채 상황은 은행이 금리를 0.5~1% 포인트 올린다고 대출 의지를 꺾을 수 없는 수준으로 진단했다.

또한 이 원장은 "전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주담대 상환액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 자금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출절벽'이 현실화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종의 가짜뉴스"라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 원장은 "은행권 주담대 상환액 규모가 월평균 약 12조원 수준"이라며 상환액을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면 대출 규모 관리는 물론,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원장은 대출수요가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나유리 기자 yul15@

/허정윤 기자 zelkova@



4일 2024년 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제4세션 디지털 금융과 인공지능 금융환경을 주제로 강연이 이어지고 있다.

/나유리 기자

"간접손실로도 банкр런 가능... 금융권, 사이버침해 대비해야"

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마하바쉬 퀼레시 IMF 부국장 강연 "사고 대응 위해 정보공유 강화해야"

"미국 소수의 은행을 보면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5%가량의 예금인출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사이버 런(사이버 뱅크런)이 일어난 사례는 없지만, 공격으로 고객의 신뢰를 잃게 되면 사이버 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4일 마하바쉬 퀼레시(Mahvash Qureshi) 국제통화기금(IMF) 통화자본시장부 부국장은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년 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디지털금융과 인공지능 금융환경'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사이버런은 스마트폰을 통해 뱅크런

(Bank run-대량 출금 사태)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미국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은 지난 2023년 18억 달러 손실이 났다는 공시를 올리자마자 고객으로부터 예금 출금 요청이 쏟아져 36시간 만에 파산했다. 앞으로는 은행의 직접 손실 외에도 사이버 침해 사고와 같은 간접 손실로 사이버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마하바쉬 부국장은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피해 중 5분의 1이 금융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권의 경우 금융거래로 인한 개인정보가 방대하고, 금융시스템 특성상 한 곳에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도미노 효과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며 "사이버 침해 사고시 노출도가 상당한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하바쉬 부국장은 또 금융기관들의 금융IT 인프라가 같은 점도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금융기관의 경우 하나의 전산 운영 센터 등을 통합해 은행, 보험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 경우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범위가 겹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국가별로 사이버 침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하고,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춰야 한다"며 "금융기관 간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금융기관 간 정보공유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몇 년전 사이버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IT관계자들과 정보를 교환하고자 했지만 어려웠다"며

"금융기관 간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오히려 사고를 알리고, 평판 리스크 등을 불러와 운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정보공유를 위해선 좀 더 세부적으로 IT직원들이 양심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윤 부장은 디지털화폐(CBDC) 등이 상용화되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사고에 대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 한은은 계좌가 있는 은행들만 접근이 가능해 사이버위협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면서도 "디지털화폐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환경변화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유리 기자 yul15@